

2017

Report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7. part1 제 77 호

of Trend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문재인 ,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 3 |
| 2. " 분권형 균형발전 , 지역주도형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해야 " | 5 |
| 3. 김부겸 " 자치입법 · 행정 · 재정 · 복지 등 4 대 자치권 보장 " | 6 |
| 4. 文대통령 , 국정기획위와 오찬...국정운영 100 대 과제 보고 | 7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정부 , 수도권 내 접경지역 성장 · 발전 지원한다 ! | 8 |
| 2. 경기도지사 · 인천시장 자질 1 위 ' 소통 능력 ' ... 수도권 규제 개선 모두 찬성 | 9 |
| 3.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육성 전략 추진 | 10 |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 | | |
|---|----|
| 1.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
| 2. 9 개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만든다 | 12 |
| 3. 지역대학 육성 , 제도가 인식 이끌까...과제 많아 ' 산넘어 산 ' | 13 |

1. 문재인,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BUSINESSPOST

02
주요내용

| 지방분권전문가 김부겸 나소열 황태규 포진 ... 의지 강하지만 돈과 권력분산이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예고
 - 지방분권을 향한 사회적 열망도 무르익어 정책추진의 적기를 맞은 것으로 여겨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 움직임 활발

- 2 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도입이 대표적
 - 고향세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방안
 -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의 1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지방 이전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
 - 문 대통령은 6 월 14 일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 것
 -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 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 제 2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전국 17 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로 광역단체장은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나 의안 제출 권한이 부여받음
 - 제 2 국무회의를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
- 지방자치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수장에 오른 김부겸 장관의 지방분권 의지
 - 김 장관은 6 월 16 일 취임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힘
 -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
 -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
 - 김 장관은 6 월 14 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냄
 -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분권 전문가와 개헌론자, 정부와 청와대 포진

-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비서관을, 정책실장 아래 균형발전 비서관을 두도록 함
 - 자치분권비서관에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균형발전비서관에는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내정
-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는 지방분권을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개헌을 통해 꽂을 피울 것으로 전망
 - 김부겸 장관과 나소열 비서관 등은 모두 지방분권 개헌론자
- 지방분권 개헌 의지

1. 문재인, 개헌과 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 성공할까

02

주요내용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들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했음
-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임을 명시하는 등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 · 자치복지권의 4 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 최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등의 단체가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 등 지방분권을 희망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음
-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6 월 13 일 취임 1 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예고
- 정 의장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 이라며 “개헌 방향은 분권화로 분권이 안 되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 고 강조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것
- 최문순 협의회장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가 시대정신” 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분권과 자치” 라고 강조

과거 정부 지역균형발전 한계 뚜렷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지만 실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 역대 정부 모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
-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근거를 마련,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만들었고 각 부처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도 두도록 했음
 -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나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가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
 - 지역균형발전 개념을 공간 중심이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봐 주무부처를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변경
 - 하지만 핵심 지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패하는 등 한계도 없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현재 모습으로 추진
-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 하지만 재정여건이 서로 다른 지자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
 -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상이 약화
 - 중요한 지역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4 대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맡았고 세종시 수정안은 국무총리실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로 흩어짐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 지역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 했지만 효과는 미미**
 - 오히려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많았음

시사점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요구 필요

주제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35>

2.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주도형으로 지역발전전략 수립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일간투데이

02
주요내용

■ 국토연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인구감소·저성장·분권화에 대응한 지역계획 체계 개편해야"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집권적 정책추진 관행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수도권 입구집중도와 지역 간 불균등 수준은 안정화 추세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인프라·문화서비스 등 질적 측면에서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지적
- 문재인 정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
 -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전개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포용적 지역발전, 스마트 지역발전, 분권형 지역발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
-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 내생적·자립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으로 지방 물적 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는 가시화됐다고 평가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던 154 개 공공기관 중 144 개를 세종시 등 10 개의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 혁신도시 이전은 인구증가와 세수 증대, 지역인재 채용, 기업유치 등 균형발전에 기여
 -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 2014년 5만 9205 명에서 지난해 14만 9570 명으로 급증,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4 억 9200 만원에서 2015년 7442 억원으로 늘어남
 -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 발생과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적 국토공간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연적·다층적 공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 또 혁신·중소도시의 신(新) 균형거점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이 이뤄져야 하고 지능형 스마트도시·지역 육성 등을 소홀히 해선 안 됨
 - 낙후지역의 신활력지대화 및 지역회생 추진도 제안
 - 국민참여형 낙후지역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1인 다지역가구와 고향사랑기부세 연계, 고향사랑펀드 등을 활용해 낙후지역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
 - 지역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강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 산업구조 및 지역회복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 최근 조선과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화에 따른 생산·고용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역이 가진 자산을 발굴해 연안 지역 등 기존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경제위기 대응이 필요

시사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거설로 인해 지방으로의 물적 이동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논의의 지속 필요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284>

3. 김부겸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 대 자치권 보장"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행정연수원 특강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밑그림' 제시**
-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밑그림이 공개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 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단체장 40 여명을 대상으로 연 특강 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 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 2 국무회의 도입안을 제시
 - **특강 자료**
 -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 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
 -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 에서 6 대 4 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
 -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담김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
 - 인구급감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접경·도서·서해 5 도·미군공여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
 - **김 장관은 특강에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를 최고의 국가 전략
 -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

시사점

지역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전략이라는 논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최우선 국정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건의 필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1/0200000000AKR20170711174051004.HTML>

4. 文대통령 , 국정기획위와 오찬...국정운영 100 대 과제 보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김진표 위원장, 오찬 겸해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정식 보고 대선때 공약 총점검…**青수정 거쳐 19 일 대국민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은 13 일 낮 청와대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
 -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을 점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할 예정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해 4 대 복합 혁신과제와 20 대 국정운영 전략, 100 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을 정식 보고
 -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 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
 - 국정기획위는 앞서 4 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 전략, 4 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음
- 100 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
 -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시사점

지역균형발전을 4 대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성과 도출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으로 위한 모니터링 필요

주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9900001.HTML>

1. 정부, 수도권 내 접경지역 성장·발전 지원한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유경제

02
주요내용

그동안 국가안보의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받아 왔던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해 정부가 성장과 발전을 지원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6 월) 26 일 대표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
 -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 여 년간 희생해온 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 ·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음
-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 제안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
- 한편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함

시사점

접경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내 격차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45>

2. 경기도지사 · 인천시장 자질 1 위 ' 소통 능력 '... 수도권 규제 개선 모두 찬성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일보

02
주요내용

| 중부일보는 창간 26 주년과 지방자치 26 년을 맞아 경기 ·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경기 · 인천 국회의원 73 명 중 56 명 (응답률 76.7%) 이 설문조사에 답함

경기북도 신설

- 최근 경기 북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 분도론
 - 50% :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6.1% :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경기북부와 남부의 재정자립도가 두배 넘게 차이나는 등 경제적 낙후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어렵게 재점화된 경기도 분도론을 이번에는 이뤄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
 - 16.1% : 언급이 시기상조다 , 7.1% : 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분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의원들은 경기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정력이 약한 경기 북부지역의 분리는 결국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자연 등을 낳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 분도가 필요없다는 의견에는 수도권이 메가시티로 자리잡기 위해 통합적인 예산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분도 필요성을 응답한 의원들은 시행 시점에 대해 온도차가 있었음
 - 경기북부지역 의원들 41.46% :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
 - 남부지역 의원들 41.46% : 내년 지방선거때 공약으로 내걸어 지방선거 후 바로 시행해야한다

수도권 규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선거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경인지역 의원들은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 50% :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 , 46.4% :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하지만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시각차는 있었음
 - 경기지역 의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았고 , 인천지역 의원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경인지역 의원들은 모두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노후시설의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투자나 일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평가
 - 경기 · 인천지역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에 묶여 30 여 년째 공업용지 조성과 공장 신 · 증설에 제약을 받아 지역경제 성장이 잡혀있다고 보기 때문
- 의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나오는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에도 지방의 반발로 진전이 없다고 봤음
 - 실제로 경기 동 · 북부 낙후지역 입지 지원과 지방 지원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도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을 예로 듬
-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경인지역 의원들이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음

시사점

수도권 규제 목적은 수도권 관리와 관련되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비수도권의 요구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45>

3.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육성 전략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1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씌워진 규제의 덫을 둘러싼 수도권 – 지방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대도시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주일 서울연구원 박사
 -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방과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대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전환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고유의 개성을 가진 대도시권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
 -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와 자본의 흐름을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규제정책으로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또는 개정, 대도시권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연합체에 계획고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수도권은 막대한 인적, 산업적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비수도권 내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성과 평가, 경기 · 인천 · 서울을 통합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수도권 광역교통청 등 대도시권교통관리기구 신설 등을 제안
-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임 의원
 - 수도권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립적인 국토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뒤쳐졌고 대도시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됨
 -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당 송 의원
 - 수도권 규제라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기업의 창의적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음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정책으로 개혁을 이뤄야 함

시사점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추진되는 관리정책으로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며,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선균형발전 후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필요

쪽지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2456>

1.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강원도민일보

02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엄동열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 권고 수준은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의 의무조항 개정
-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인재채용 비율을 30% 까지 단계적 향상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정보 공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7728
- 발의연월일 : 2017. 6. 30
- 제안이유

현행법 제 29 조의 2 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전 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 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 29 조의 2 제 1 항 및 제 5 항).

- 법안 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9 조의 2 제 1 항 본문 중 “해당” 을 “신규 채용인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으로 ,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를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인재” 라 한다)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로 하고 , 같은 항 단서 중 “우선 고용대상” 을 “이전지역인재 채용대상” 으로 하며 ,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같은 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100 분의 20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00 분의 25
3. 2024년 이후 : 100 분의 3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사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필요하며 , 이후 혁신도시 시즌 2 에서는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참조

<http://m.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61563>

2. 9 개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만든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향신문

02
주요내용

|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학생과 교수 등을 교류하고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이른바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

-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원칙과 맞물려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참여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 개 대학
- 거점 국립대 9 개교가 인적 · 물적 교류 활성화로 대학 발전을 꾀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나섬
 - 이 사업은 지난 4 월 말 전북대와 제주대가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 II (대학 간 혁신형) 연구과제로 제안하면서 공론화
 - 당시 전북대 등은 '내셔널 유나이티드 코리아' (NUK· 가칭 한국대학) 사업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네트워크로 인적 · 물적 교류가 가능한지를 연구해보겠다고 제안
- 거점 국립대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생 및 교수 교류, 도서관 등 학교시설 공동 이용으로 동반상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국립대 간 학생 교환의 폭을 넓히고 교수와 교직원까지 교류하는 게 특징
 - 거점 국립대들은 조만간 대학별로 2~3 명씩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8 월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
- 경북대, 부산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 9 명은 4 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 발전방향' 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국립대 네트워크 방안에 따른 토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 조성
- 오정일 경북대 기획부처장 (행정학부 교수)
 - 이날 포럼은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등 2 명이 발제자로 나서고 국립대 총장 9 명이 4~5 분씩 토론 기회를 갖게 되며, 국립대 네트워크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
- 교육부 관계자
 -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설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음
 - 거점대가 커야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
 - 포럼에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
- 국립대 네트워크는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
 - 대학 연합이라면 궁극적으로 파리 1·2·3 대학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UC)처럼 대학 명칭까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인적 ·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공유해서 서로 원활하자는 취지
 - 현재는 새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에 발맞춰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가 가능한지를 연구해보는 단계

시사점

지역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의 인재 양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주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32209005&code=940401#csidx468f437bc20ae7ca99b26a8c972522e

3. 지역대학 육성, 제도가 인식 이끌까...과제 많아 '산넘어 산'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7.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대학신문

02

주요내용

- 문재인정부가 지역대학을 키우는 종합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점은 환영받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음
- 먼저 인식이 제도를 따라오지 못할 때 불거지는 역차별 논란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책은 단연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 가장 단기적으로 '지역균형'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얘기
 -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이라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76 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16 곳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30~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될 전망
- 그러나 당장 일자리 문제가 예상되며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부터 쟁점
 - 현재는 지역인재를 최종 학력 즉,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제외되기 때문
 -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도 쟁점을 알고는 있지만 즉답은 피하고 있음
- 지역균형을 위한 제도에 대한 갈등은 대학입시 지역균형선발전형만 봐도 알 수 있음
 - 서울대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도입했으나 일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특혜라는 부정적 인식이 큼
 - 지역 인프라 차이와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
 - 지역 기업들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을 선호하고 있어, 인식이 바뀌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
- 이 같은 반발이 나오지 않으려면 결국 충분한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쟁 완화와 지역 산업 및 인프라 확충, 지역 우수 인재들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정책 향방도 관심사항
 -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기간 대학특성화사업에 '정원감축 가산점'을 둬 지방대학이 96%의 정원을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교육부는 2주기 평가는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 상위 40~60%를 선정할 때에는 수도권과 지방 대비율을 나누기로 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대에서는 불신을 지우지 못했음
-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명지대 교수) :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산업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선결돼야 함
-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인 지역대학의 움직임을 뼈출 수 있을지도 관건

시사점

지방대학의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역할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우수 인재 양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필요

주제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092>